

함께 웃는 학교,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늘품우리가 함께합니다.

사랑 나눔 배려

학교폭력 사안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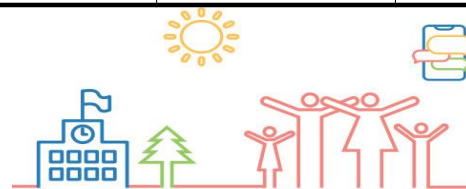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JEONBUK STATE OFFICE OF EDUCATION
[민주시민교육과]



학교폭력 현황(2024.7.31.)

구분	'23.7.31.				'24.7.31.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신고 건수	563	695	329	1,587	452	732	368	1,552
심의 건수	95	218	100	413	118	265	133	516
학교폭력 인정 건수	57	115	43	215	54	153	71	278
심의 비율(%)	16.9	31.4	30.4	26.0	26.1	36.2	36.1	33.2
심의건수 대비 인정 비율(%)	60.0	52.8	43.0	52.1	45.8	57.7	53.4	53.9



관계개선조정지원단 운영

- **관계개선 조정 신청**
 - ✓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공문 신청(교육지원청에서 민주시민교육과로 공문 발송)
- **관계개선 조정 신청 이후 절차**

신청기관 방문	예비조정	본조정	결과보고	사후방문
조정위원 교육지원청 담당자	조정위원	조정위원	조정위원	조정위원 교육지원청 담당자



관계개선조정지원단 운영

- 관계개선 조정 신청
 - ✓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공문 신청(교육지원청에서 민주시민교육과로 공문 발송)
- 관계개선 조정 신청 이후 절차

신청기관 방문	예비조정	본조정	결과보고	사후방문
조정위원 교육지원청 담당자	조정위원	조정위원	조정위원	조정위원 교육지원청 담당자



전담기구의 역할

- **사안접수 및 조사** : 신고접수대장 기록, 보호자 통보, 학교장 보고
-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최대 7일)**
-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분리 심의**
- **최초 신고자 확인서 접수, 사안 접수 보고서 작성 등**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 2주 이내(필요시 1주 연장 가능)
- **긴급조치 여부 심의** : 피해학생 요청에 따라 6호 · 7호 조치 심의
- **졸업 직전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심의**

전담기구의 역할

- 초기대응

- 담임교사가 최초 인지한 경우
 - 학교폭력 담당교사와 사안 공유
 -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사안 통보**
- 학교폭력 담당교사(전담기구)
 - 신고접수대장 기록 : **보호자 통보**, 학교장 보고 내용 포함
 - **즉시분리** : 피해학생 의사 확인 후, 가해자(교사포함)를 피해추정 학생으로부터 **즉시분리(7일 이내)**
 - 사안보고 : 48시간 이내 교육지원청 서면 보고(공휴일 미포함)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 초기대응(긴급조치)

- 피해학생

- 1호(심리상담 및 조언), 2호(일시보호),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6호(그 밖에 필요한 조치)

- 가해학생(수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 가능)

- 1호(서면사과), 필수 2호(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 3호(학교에서의 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 긴급조치가 내려진 사안을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하는 경우

- 학교장 직권으로 긴급조치 취소 가능(취소 내용 내부결재 필요)

**학교폭력의 허위 신고를 무고죄로
다시 학교폭력 신고를 할 수 있나요?**

(5쪽 13번)

관련 법률 및 판례

▶ 형법 제129조

타인으로 하여금 공직에 임명되거나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징계처분 : 공법상의 강제징계 처분하는 신분적 제재(대판2014도6377)

답변

→ 학교 내에서의 성립 여부는 심의

있습니다.

※ 학교 내에서의 성립 여부와 학생들간의 관계로 볼 수 있는지는

법리적 문제로써 명확한 판례는 없음

학교 밖에서 발생한 폭력도 학교폭력 인가요?



관련 법률 및 시행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답변

→ 학교폭력입니다.

※ 학교 내외를 불문하고 피해자가 학생이면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어 학교폭력으로 처리됨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사안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관련 법률 및 시행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답변

→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사안은 접수하되, 피해측 의사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음

**학생이 아닌 피해자가 신고한 사안도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해야 하나요?**



관련 법률 및 시행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답변

→ ① 학교폭력 발생 당시 피해자가 학생이었고 ② 신고 현재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해야 합니다.(①② 모두 충족)

※ 다만, 피해자는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할 수 없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음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안을 처리해야 하나요?**



관련 법률 및 시행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답변

- 학교가 인지한 경우, 학교폭력으로 접수하고 절차대로 사안 처리를 해야 합니다.
- ※ 다만, 피해추정 학생이 오인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학교 폭력 아님으로 종결 처리 가능함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도 학교폭력 법률 적용을
받는 학생으로 보아야 하나요?**



관련 법률 및 시행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①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답변

→ 학교폭력 법률 적용을 받는 학생으로 보아야 합니다.

**검(경찰) 및 법원에서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사안 처리를 해야 하나요?**



관련 법률 및 시행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별도로 사안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답변

※ 검(경)찰 및 법원의 처분과 학교폭력 관련 조치는 법적인 근거와 그 입법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사안처리를 반드시 해야 함(이중처벌 아님)

**중학교때 발생한 사안을 고등학교 재학 중에
신고한 경우, 사안 처리를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관련 법률 및 시행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답변

→ 현재 소속 학교인 고등학교에서 사안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학적 변경이 가능한가요?**



관련 지침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된 때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학적 변동을 제한하고 있음
- 다만,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전학)에 따른 조치와 함께 수 개의 조치가 동시에 부과된 경우에는 제8호(전학) 조치를 우선 시행할 수 있음

답변

→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자발적으로 학적을 옮길 수 없습니다.

※ 심의위원회 조치 이행 완료 전에 거주지 이전 등으로 가해학생이 전학을 진행하는 경우, 전출교에서는 전학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보류하는 등 전학을 보낼 수 없음.
다만, 피해학생의 학적 변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폭력 행위 없이 몰래 물건을 훔친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관련 법률 및 시행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답변

→ 폭력 행위가 없는 일회성 성격의 단순 절도는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으나, 괴롭힘 등을 목적으로 한 특정학생에 대한 지속·반복적인 절도는 학교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 협박 등의 폭력 행위를 동반하거나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강제로 뺏는 경우, 괴롭힘 등을 목적으로 한 특정학생에 대한 지속·반복적인 절도 등

**쌍방 간 합의 하에 싸움을 한 경우도
학교폭력인가요?**



관련 법률 및 시행령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학교폭력 사안은 접수하여야 하며 학교폭력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함
- ※ 쌍방 간의 동의에 의한 폭력 행위라 하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학교 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음

답변

→ 쌍방 간의 동의에 의한 폭력 행위라 하더라도 폭력 행위가 있으므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안을 인지한 경우 학교가
초기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관련 법률 및 시행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 ①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관할교육지원청에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사안을 보고하여야 함(공휴일 미포함)

답변

- ① 신고접수대장 기록
 ②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자 분리 의사 확인 후 분리(7일 이내)
 ③ 가해추정 학생에게 학교장 긴급조치 2호 접촉금지 의무 시행
 ④ 보호자 통보 및 학교장 보고
 ⑤ 사안보고(48시간 이내 사안접수보고서 제출, 공휴일 미포함)

**모든 사안에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배정되나요?**



관련 법률 및 시행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전담부서의 구성 등)

- ② 교육감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 조사·상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학교폭력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활용하는 학교폭력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의 역할, 요건,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교육부 방침은 모든 사안에 전담 조사관을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의 교육적 판단에 따라 종전대로 전담기구 등을 활용**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사안조사를 할 수 있음
 - ※ 단, 학생 및 보호자가 전담 조사관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는 반드시 전담조사관 배정을 요청하여야 함

답변

→ 아닙니다.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전담조사관을 배정합니다.

**전담조사관 사안조사시 교원이 반드시
동석을 해야 하나요?**



관련 지침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학생 및 보호자 의견 청취, 학생의 심리적 상태, 나이, 성별, 사안의 성격, 전담조사관 요청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교원 동석 여부를 결정함

답변 → 여러 요건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안조사 시 가해추정 학생이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관련 지침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추가 사안을 인지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함)

- ①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는 경우 : 보호자 안내 및 학교장 통보 후, 가해추정 학생의 피해 주장 내용 조사 실시 → 관할교육지원청에 사안 보고(수정)
- ②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사안을 조사하는 경우 :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가해추정 학생의 피해 주장 내용을 학교에 통보 → 학교에서 보호자 안내 및 학교장 통보 후, 관할교육지원청에 사안 (추가)보고 →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가해추정 학생 피해주장 내용 조사 실시

답변

→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 경우, 피해 주장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 전담기구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사안 조사 절차가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람

**전담조사관 사안조사 시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조사가 가능한가요?**



관련 지침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사안 조사 시 학교 이외의 장소 활용은 지양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관할교육지원청 장소 등을 활용할 수 있음

답변

→ 사안 조사 시 학교 이외의 장소 활용은 지양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안 조사한 내용을 보호자에게
공개할 수 있나요?**



관련 법률 및 시행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답변

→ 공개에 제한이 있습니다.

- ① 공개가능 : 간략한 신고 내용, 본인의 자녀가 작성한 진술(확인)서
② 공개불가 : 상대학생 진술(확인서), 사안조사 보고서, 심의결과 보고서 등

**전담조사관 사안조사 보고서가 미흡한 경우,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수정할 수 있나요?**



관련 법률 및 시행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후략)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전담부서 구성 등)

- ② 교육감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 조사·상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학교폭력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답변

→ 관련학생 보호자 의사 확인 후, 전담기구 등을 통해 추가로 조사하여 사안조사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 담당자가
녹취를 할 수 있나요?**



관련 법률 및 시행령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답변

→ 공개된 장소에서 당사자 간 대화의 녹음(녹취)은 가능합니다.

※ 단,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함

**사안조사 시에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관련 법률 및 시행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 2024.3.1.부터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에게 사안 조사 위탁 가능

답변

→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조사 방법(절차)과 의견 진술의 기회 등을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합니다.

※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수업 시간에 사안 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학부모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별도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쌍방 간에 주장이 다른 경우 학교에서
피(가)해를 구분할 수 있나요?**



관련 지침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학교는 피·가해를 구분할 권한이 없음(심의위원회 권한임)

※ 또한, 학교폭력 사안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학교에서는 사안 접수를 거부할 수 없음

답변

→ 학교에서는 피·가해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신고한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자는 무조건 분리해야 하나요?**



관련 법률 및 시행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 ①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 최대 7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답변

※ 징계성 조치가 아니며 이미 공간 분리가 이루어졌거나 피해학생이 분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음

**방학 기간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
개학 후 분리할 수 있나요?**



관련 지침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학교장이 인지한 날로부터 개학일까지 7일의 범위 내에 있는지를 고려하여 분리 시행 여부를 결정함

답변

→ 분리는 심리적 불안감 해소 및 2차 피해를 방지하여 고조된 학교폭력 갈등 상황을 완화하고자 하는 교육적 조치로써 최대 7일에서 학교장이 인지한 날로부터 개학일까지의 일수를 차감한 날만큼 분리합니다.

- ① 인지한 날부터 개학일까지 3일이 남은 경우 : $7일 - 3일 = 4일$ 의 범위 내에서 분리함
- ② 인지한 날부터 개학일까지 7일이상 남은 경우 : 별도의 분리를 시행하지 않음

**동일 학생이 동일 학생을 계속 신고하는 경우
신고 사안마다 분리해야 하나요?**



관련 지침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동일한 피해학생이 동일한 가해학생과 최초 분리 이후, 분리 이전 사안에 대해 연속적으로 신고할 경우, 최초 1회 분리만 실시하고 분리 이후 새로운 사안이 발생하여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분리를 실시할 수 있음

답변

→ 최초 분리 이후, 이전의 사안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할 수 없으나 최초 분리 이후, 새로운 사안이 발생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피해학생 의사를 확인 후, 분리해야 합니다.

학교장 긴급조치란?



관련 법률 및 시행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중략)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중략)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1호(심리상담 및 조언), 2호(일시보호), 3호(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6호(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3호(학교에서의 봉사)
5호(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답변

→ 사안을 접수한 후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전까지 통상 5~7주가 소요되므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장이 긴급하게 내리는 조치입니다.

① 피해학생 학교장 긴급조치 :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추인 불필요)

② 가해학생 학교장 긴급조치 :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

- 즉시 보고 :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공문을 발송할 때 긴급조치 보고서를 첨부하여 보고
- 추인 : 심의위원회에서 학교장 긴급조치 결정에 대한 동의

학교장 자체해결이란?



관련 법률 및 시행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답변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학생이어야 함
 - ② 가해추정 학생이 가해를 인정하여야 함(가해행위 불인정 시, 학교장 자체해결 불가)
 - ③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④ 피해학생(보호자)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함
- ※ 학교는 학교폭력 신고접수일로부터 최대 2주 이내(1주 연장 가능)에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학교장 자체해결을 취소하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나요?**



관련 지침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피해학생의 재산상 피해 복구(신체, 정서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사안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해결을 취소하고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답변

→ 네.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① 피해복구 약속을 가해학생 측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② 해당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관련 학생들의 출결 처리는?**



관련 지침

▶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 학교장은 파·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에 의견진술 절차 등의 사유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답변

→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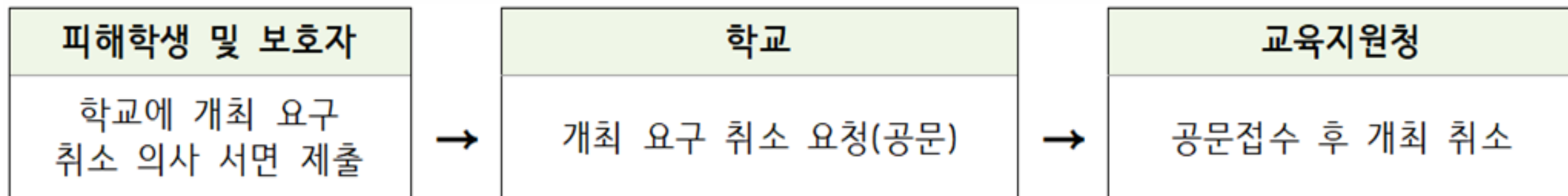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를
취소할 수 있나요?**



관련 지침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이후,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었거나 학교폭력 아님이 인정된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취소할 수 있음



답변

→ 피해학생 및 보호자 요청에 따라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경우,
반드시 가해학생 조치를 내려야 하나요?**



관련 법률 및 시행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① 피해추정 학생에게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가 없는 경우
- ② 가해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거나 가해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답변

→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경우,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나, 피해추정 학생의 피해가 없거나 가해행위의 증거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해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관련 법률 및 시행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별표8] 2조 나목에 명시되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도 상위 법령에 따라 출석 인정으로 처리할 수 있음

답변

→ 학교장 판단 하에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인지한 교사가 신고하였으나
피해추정 학생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관련 지침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 사안 접수는 하되, 피해학생(보호자)측 의사(학교폭력 아님 및 오인신고 인정 등)에 따라 학교폭력 아님 사안으로 종결할 수 있음(학교폭력 아님 확인서 제출 필요)

답변

→ 피해학생측 의사에 따라 학교폭력 아님 사안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학교폭력 아님 및 오인신고 인정 등의 사유가 위력에 의한 것일수도 있으니 신중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함

교육지원청 피해학생 전담 지원관 역할은?



관련 법률 및 시행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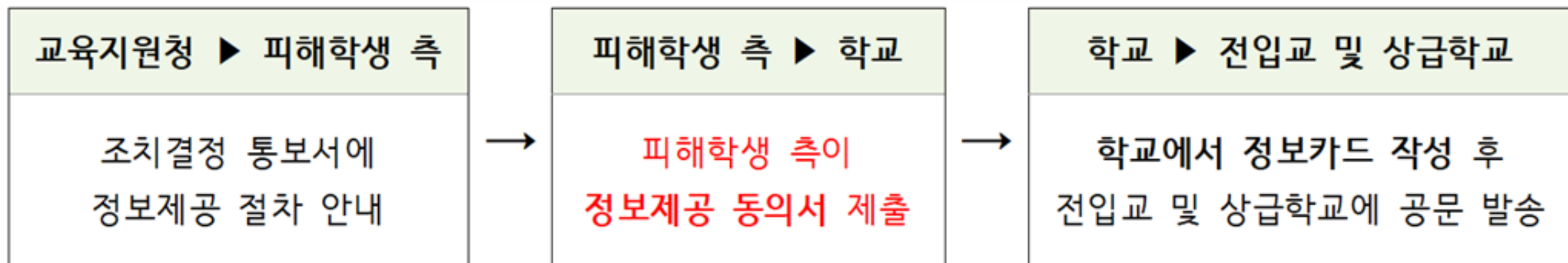
→ 교육지원청별로 담당 직원 1명을 전담지원관으로 지정하여 위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전출(진학)하는 경우
피해정보를 전입(상급)학교에 제공할 수 있나요?**



관련 지침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답변

→ 피해학생(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학생이 전학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 및 시행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4학년도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

- 성폭력 피해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반드시 교육장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고, 이때 배정된 학교장은 전학을 거부할 수 없음(초등학생은 보호자 1명의 동의 필요)

※ 첨부서류

- ① 성폭력 피해학생 전입학 배정 희망원서, 개인정보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각 1부
- ② 성폭력 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 병의원 발급 성폭력 피해 진단서, 성폭력 신고 접수증(택1 제출)

답변

→ 피해학생(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자도 심리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관련 지침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심리상담비를 지원하고 있음

비용	▶ 심리상담 회기당 6만원, 심리검사 26만원(종합심리검사 기준) 지원	
신청 절차	학교 ▶ 상담기관/도교육청	상담기관 ▶ 학교
	심리상담 신청서 작성 및 공문 발송	심리상담 이수 확인증 송부

답변

→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상담심리기관에서 심리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장이 14일 이내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관련 법률 및 시행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⑨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 : 조치 결정 통보 기한
- 심의위원회로부터 파·가해학생 조치 집행을 요청받은 교육장은 가해학생측에게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조치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함

답변

→ 교육장이 가해학생측에게 해당 조치가 결정되었음을 알리는 조치 결정 통보 기한입니다.

**심의위원회 조치 중, 출석이
인정되는 조치는?**



관련 법률 및 시행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⑫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 3호(학교에서의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답변

→ 출석이 인정되는 조치는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입니다.

※ 6호 출석정지 : 출석 미인정 결석 처리

심의위원회 조치 중, 서면사과의 의미는?



관련 법률 및 시행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항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서면사과는 강요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면사과의 내용을 학교장이 확인하여 피해학생에게 전달한 경우, 조치를 이수한 것으로 봄

답변

→ 서면으로 폭력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학생에게 사과하는 조치입니다.

심의위원회 조치 중, 접촉 금지의 의미는?



관련 법률 및 시행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항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피해(신고, 고발)학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정보통신망 행위 포함)

답변

→ 피해학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① 본(2호) 조치로 가해학생을 다른 공간으로 분리할 수 없음

② 교육활동 및 일상 생활 가운데 의도하지 않은 접촉에 대해서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님(체험학습, 수업 등의 교육활동 참여 가능)

**심의위원회 조치 중, 특별교육이수와
심리치료의 차이점은?**



관련 법률 및 시행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항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답변

→ 교육적 관점과 치료적 관점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특별교육이수 : 전문기관에서 상담,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조치
- ② 심리치료 : 정신과적 진단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리는 조치

심의위원회 조치 중, 출석정지의 의미는?



관련 법률 및 시행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항

6. 출석정지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미인정 결석)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출석정지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나 **등교를 제한할 수는 없으며**, 출석정지 기간 동안 **보호자 의사에 따라** 자율학습, 가정에서의 교육, 위탁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답변

→ 출석정지는 등교정지가 아닌 해당학급 출석을 제한하는 조치로써 학교 등교를 막을 수 없습니다.

심의위원회 조치 중, 전학 조치는?



관련 법률 및 시행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항

8. 전학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 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제8호(전학) 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즉시 (7일 이내)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함

▶ 2024학년도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

- ①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강제전학 조치된 학생은 피해학생이 소속된 학교 및 강제전학으로 전출된 학교로 다시 전·편입학할 수 없다.
- ② 관외지역으로의 강제전학 조치 또는 학(교)군이나 (통)학구를 벗어나 강제전학 조치된 학교 폭력 가해학생은 강제전학 조치 이후 1년 이내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지역 또는 전출된 학교가 소속된 학(교)군이나 (통)학구로 전·편입학할 수 없다.

답변

→ 배정 요청을 받은 교육지원청은 동일지역(계열) 원칙에 따라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정원 외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 개최 대기 중에 다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련 지침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별도의 건으로 보고 ① 학교폭력 접수 ② 가해학생에 대한 2호 접촉금지 시행 ③ 피해 학생으로부터 가해자 분리 ④ 48시간 이내의 사안보고 ⑤ 전담조사관 배정 및 사안 조사 등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를 다시 적용하여야 함
- 가해학생이 학교장 긴급조치 2호를 위반하여 동일학생에 대해 피해를 준 경우에도 별도의 학교폭력으로 접수하여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를 다시 적용하여야 함

답변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를 다시 적용하여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의 특성, 동일 피해학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안을 병합 또는 분리할 수 있음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나요?**



관련 법률 및 시행령

-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제2항
6.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6조의2(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답변

→ 가해학생 조치 사항만 기재하고 피해학생 보호조치 사항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관련 법률 및 시행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제2항

6.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서면 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답변

→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 조치와 심의위원회에서 추인된 가해 학생 긴급조치 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 단, 2호 접촉금지 조치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치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학교장 가해학생 긴급조치 2호 접촉금지는 기재하지 않음

행정심판이란?



관련 법률 및 시행령

▶ 행정심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 구제 제도임

① 행정청: 관할교육지원청

② 청구인: 관할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답변

→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행정적 결정을 다투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가해학생 조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나요?**



관련 법률 및 시행령

▶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답변

→ 아닙니다. 가해학생이 조치 실행을 유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THANK YOU

사랑 나눔 배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늘품우리**[office.jbedu.kr/woori]가 함께 합니다.